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51호로 2025년 11월 7일 이성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안 제 5조)
- 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2조)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 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2024. 5. 16.)되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
-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 20개월, 21개월로 단축시행 중)이며, 보충역 및 대체역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최대 3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복무기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제3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2)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이를 통해 복무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제대군인 청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임.

○ 안 제13조(비밀유지 의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복무기간을 고려한 지원연령 상한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 이를 통해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원 및 생활안정에 대한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